

# 수완지구 드메르 웨딩홀 공공 도로부지 점용 특혜 의혹

실거래가 50억인데 부지 10년째 월 60만원...인근 점용료의 25%  
진·출입로 허가 받아 버스주차장 사용...광산구 뒤늦게 행정처분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예식장 소유 주차장은 유료화 매년 억대 수익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영업 중인 '드메르 웨딩홀'이 10년째 50억인데 공공 도로부지를 버스 주차장 용도로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광산구가 매년 땅값의 한 달 이자도 안되는 월 임대료 받고 사용 허가를 내주고, 관리·점검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드메르 웨딩홀'은 지난 2013년 광산구로부터 도천동 277-19번지 1740㎡(527평) 도로부지에 대해 차량 진출입 등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당초 목적과 달리 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광산구는 '드메르 웨딩홀' 측이 도로 점용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도로를 점용한 점을 확인하고, '도로법 제 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대상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 처분을 통지했다.

특히 이번 행정 처분 과정에서 해당 점용 부지가 주변 시세를 적용할 경우 50억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드메르 웨딩홀'이 그동안 광산구에 납부해 온 점용료에 대한 월 임대료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현재 평당 351만 4500원이지만, 현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면 평당 1500만원대로 50억대를 넘는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드메르 웨딩홀' 측은 해당 부지 점용료로

월 평균 60여만원에 불과한 연간 670여 만원만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각에선 광산구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메르 웨딩홀 인근에서 필자 도로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A(64)씨는 "현재 동일한 조건으로 점용료를 산출할 경우 '드메르 웨딩홀' 보다 4배 이상 비싼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달리 드메르 웨딩홀 측은 5년 전부터 정작 자신들의 부지에 조성한 주차장 시설은 광주시민 등 이용객을 대상으로 유료화하고, 매년 억대 규모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

공공 도로부지는 월 임대료에 자신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정작 시민을 상대로는 유료 주차장 장사를 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드메르 웨딩홀' 관계자는 "주차장 운영 수익으로 주말이면 70만~80만원 정도 발생할 뿐이며, 현재 점용하고 있는 도로 부지의 면적도 100여평 정도 알고 있다"면서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광산구 관계자도 "10년 전 공시지가와 감액 규정을 적용해 점용료를 산출하다 보니 월 임대료 논란이 제기된 것 같다"며 "당초 허가 조건을 위반한 만큼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점용료를 산출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드메르 웨딩홀 측이 무단 용도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 도로부지(직사각형 표시 부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드메르 웨딩홀'은 주차장 특혜 논란 외에도 주말·휴일이면 주변 교통난을 가중시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드메르 웨딩홀은 오픈 당시만 해도 분관 건물 내에 4개용 규모의 예식장을 운영했으나, 이후 주변 교통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별관 신축 이후 2개용을 확장해 현재 6개용 규모의 대형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난 우려 등이 큰 예식장은 한 장소에 예식홀을 집중 배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드메르 웨딩홀'처럼 한 곳에 단독으로 6개홀을 운영하는 예식장은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게 예식장 업계의 설명이다.

드메르 웨딩홀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처음

오픈했을 때도 교통난이 심각했는데, 별관 신축 후 주말이면 웨딩홀 방문 차량이 인근 도로에 500여m 이상 차량이 늘어선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광산구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학동 붕괴 참사' 현장 철거 뒷돈 주고 수수한 업체 대표 3명 징역형

### CCTV 삭제 등 증거도 인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석면·지장물 철거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A(47)·B(45)·C(39)씨 3명에 대해 징역 4월~1년 6개월에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철거업체 대표이자 A씨는 학동재개발 사업에서 석면 철거공사를 따내기 위해 2018년 7~9월,

2020년 5~6월께 두 차례에 걸쳐 학동재개발 브로커 문흥식(64·수감)씨 등에게 총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 전무이사인 B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붕괴사고 이후인 지난 2021년 6월 10일께 컴퓨터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직원 C씨는 이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석면철거 공사를 수수하고 지장물(사업부지내 공사의 방해가 되는 시설) 철거공사는 다른 건설업체 명으로 따내 하도급하는 수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회사 컴퓨터 5대의 하드디스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사무실 방문자들을 숨기기 위해 회사 CCTV저장 내용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감형을 했다"고 판시했다.

학동 붕괴참사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 연고 케이스에 마약 밀수입 태국인 징역 6년 중형

일명 '호랑이 연고' 케이스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태국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태국인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 부터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A씨는 합성마약 6018정을 알루미늄 호일에서 싸서 유명 소염진통제(타이거 밤·일명 호랑이연고) 케이스에 넣어 견어불과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태국 지인과 공모해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한 것은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폭동' 말했다며 부산 사람 찾아가 스토킹

### 광주지법 항소심 벌금 400만원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지인이 '광주폭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고 만나자고 수백차례 전화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400만원 형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다음날인 19일부터 22일까지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총 15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피해자가 '광주폭동'이라는 말을 언급하자 "광주폭동입니까?", "빨리 나와라 어디야" 등을 비롯해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 살고 있는 A씨는 피해자가 사는 부산에 찾아가 부산지역 조폭 이름을 언급하며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A씨가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주요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사람의 보험비의 두  
전국민의 경제 부담

# 보험사기 ZERO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 금융감독원 | h-well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